

올바른 의·과학 보도를 위한 제언

상업적 연구 성행하는 시대… 비판적 과학 저널리즘 정착돼야

김우재 / 오타와대 세포분자의학과 조교수

최근 인보사 사태로 올바른 의·과학 보도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다. 황우석 사태를 겪으며 못매를 맞고 쇠신을 다짐했던 한국 과학 저널리즘의 2019년 현주소는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듯하다. 이제 정치와 사회 주변에 머물며 선정적인 정보만을 흘리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과학과 사회의 문제에 집중하는 비판적 과학 저널리즘을 보여 줘야할 때가 아닐까. 편집자 주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언론의 주요 섹션이 아니다. 그건 한국 언론만의 잘못이 아니라, 언론이 지나치게 정치면과 사회면에 경도된 사회를 반영하고 있고, 또 그런 언론에 의해 사회가 뉴스를 편식하게 된 악순환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언론에서 크게 다뤄진 건 2005년 황우석 사태부터다. 그 전

의 과학기술 보도란 외국 기사 베끼기, 국내 연구진의 논문 홍보,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보도 등이 전부였을 뿐이다. 당시 황우석 연구진의 비리를 밝혀낸 건 과학기자가 아니라 MBC <PD수첩>이었고, 황우석 사태에서 과학기자 대부분은 황우석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과학 언론의 잘못이 부각되자, 과학기자협회는 ‘과학보도 윤리선언’을 발표했지만, 2019년 우리는 다시 인보사 사태를 만났다. 황우석 사태 이후, 변한 건 별로 없다.¹⁾

주변성, 비전문성, 피상성, 선정성

과학 저널리즘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논문들은 이미 2000년대에 상당수 발표됐지만, 이 논문들의 제안은 여전히 한국 과학 저널리즘 안으로 흡수되지 않았다. 저널리즘의 기본 목적을 “시민들에게 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주인이 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²⁾이라고 볼 때, 한국의 과학 저널리즘은 시민들을 자유롭게 만들지도,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하지도 않을

2009년 10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황우석 박사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1) 이에 관해선 필자가 뉴스톱에 기고한 글을 참고할 것. 김우재, <과학뉴스를 의심하는 과학자의 '팩트체크' 출사표>, 뉴스톱, 2019.2.14.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5>

2) Kovach, B., Rosenstiel, T.,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Three Rivers Press (CA), 2014.
김영욱·박성철, <과학보도와 과학저널리즘>, 한국언론재단, 2005.에서 재인용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보다는 무분별하게 선별된 정보를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신문의 과학 기술 보도를 분석한 2000년대 초반의 논문을 살펴보면, 한국 과학 저널리즘은 ‘주변성, 비전문성, 피상성, 선정성’ 등의 방식으로 비판받았다.³⁾ 주변성이란 과학 기술 보도가 한국의 언론 환경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등만을 시사로 취급하는 편향된 구조에서 보도하는 것에 익숙하다. 바로 이런 이유로 과학기술 전문기자는 언론 내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돼 배출될 수 없다. 대부분의 과학기술 전문기자는 과학기술 현장의 경험을 체득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저널리즘의 가장 핵심인 진실성 추구에서 현격한 비전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학적 지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과학기술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까지를 포함한다. 이렇다보니 한국의 과학기술 보도는 대부분 보도자료를 근거로 쓴 피상적 내용이거나, 외국 기사의 짜깁기 수준에 멈춰 있다. 국내에 과학기술뉴스 섹션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미디어도 별로 없지만,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올라오는 뉴스를 대충만 분석해 봐도 상황은 여전히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과학기술 보도 중에서, 심층 취재를 통해 분석되는 뉴스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언론 데스크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 과학기술 보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선정성이다. 한국 과학기술계가 박정희 시대에 경제 발전과 애국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일종의 정치적 도구로 성장한 것이 사실이라면⁴⁾, 과학 저널리즘은 바로 이 프레임 속에서 과학기술계의 업적을 보다 쉽게 그리고 과장해서 보도함으로써, 바로 이런 정치

“

국내에 과학기술뉴스 섹션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미디어도 별로 없지만,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올라오는 뉴스를 대충만 분석해 봐도 상황은 여전히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과학기술 보도 중에서, 심층 취재를 통해 분석되는 뉴스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언론 데스크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

적 도구로서의 과학기술을 강화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 성장한 한국의 과학대중화 운동은 마치 과학의 교양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해, 시민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프레임 속에서 출판되는 과학 보도는 몇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첫째, 이런 선정적인 보도 방식은 시민들에게 과학을 미디어와 특정 전문가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직접 과학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과학 저널리즘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선정적 기사가 아니라 맥락을 직접 보여주는 심층 보도에 집중해왔다면, 아마 과학기술 보도를 접하는 시민들은 지금쯤 직접 해외의 과학기술 뉴스를 확인하고 과학기술계를 견제 혹은 지원하는 다양한 운동을 펼쳤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과학기술 보도는 여전히 초·중·고교생에게 전달하는 잘 포장된 연예뉴스

3) 김동규, <현대 언론과 과학문화>, <과학문화의 이해: 커뮤니케이션 관점>, 일진사, 101-185쪽, 2000.

4) 김근배, <과학기술입국의 해부도>, 역사비평, 236-261쪽, 2008.

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이다. 한국 과학대중화 운동에서 선정성은 결국 과학기술 보도를 가십성 뉴스에 머물게 하며, 결국 시민과 과학기술계를 괴리시킨다.⁵⁾ 둘째, 선정적 과학기술 보도는 시민들이 과학기술이 지닌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과학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에 시민이 눈 감게 만든다. 즉 재미만을 추구하는 과학대중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과학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시민의 비판적 관점을 희석시키고,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기능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맥락을 보지 못하도록 시민의 눈을 가린다.⁶⁾ 바로 그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과학대중화 운동을 하는 과학기술인과 과학기술 전문 언론 대부분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또 사회가 과학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거의 발언하지 않거나,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반응만을 보여줄 뿐이다. 예를 들어 최근 독립 언론 뉴스타파가 심층 취재하고 있는 와셋(WASET)·오믹스(OMICS) 등의 가짜학회 참가 문제에 대해,⁷⁾ 대부분의 과학기술 보도는 이를 학회에 참석한 이들의 개인적 윤리 문제인양 선정적 보도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가짜학회 참석 문제는 한국 과학기술정책과 연구비 집행,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고질적인 병폐 등이 누적된 구조다. 선정적 과학 저널리즘은 이런 방식으로 과학을 대중화시키기는커녕, 대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낮은 수준으로 고착시킨다.⁸⁾

기만, 은폐, 확인, 과장과 과학 저널리즘

저널리즘의 진실성 문제는 긍정적 접근 방식보다, 진실성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나타나는 죄를 통한 부정적 접근에 의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⁹⁾ 이러한 죄의

예로 기만, 은폐, 확인, 과장 등이 있다. 김영욱과 박성철의 연구에 따르면 “기만은 올바른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즉 거짓말을 말한다. 은폐는 정당한 알 권리가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보나 정보의 일부분을 알려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확인은 어떤 사실(사실관계)이 실증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과장은 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만, 서술 형태를 통해 실제와 다른 인상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¹⁰⁾

현대사회는 매우 빠르게 기술사회로 접근 중이다. 매일매일 언론을 장식하는 최첨단 과학기술 보도들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무섭게 성장 중인 다양한 스타트업의 모습은 더 이상 과학기술 보도가 사회의 변화와 떨어질 수 없음을 드러낸다.¹¹⁾ 엘론 머스크(Elon

5) 한국 과학대중화 운동에 대한 필자의 소고는 다음 글을 참고할 것.

김우재, <새로운 과학 운동을 향해>, 뉴스앤조이, 2017.9.18.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3187>

김우재, <어떤 과학대중화>, BRIC, 2018.8.27.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id=297168&Board=news>

6) 오철우, <과학과 언론의 소통 가능성>,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13-25쪽, 2004.

7) 김강민, <뉴스타파, 가짜 학회 '오믹스' 학술지 투고 학자 데이터 공개>, 뉴스타파,

2019. 3. 14. <https://newstapa.org/44087>

8) 과학대중화와 연결된 과학 저널리즘의 타락에 대한 더 자세한 언급은 '김영욱, 박성철(2005)'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중에게 ‘과학 지식을 파는 기능(Selling Science, Nelkin 1995)’에 한정된 과학 보도는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한다. 코링(Mattias Kohring)에 따르면 과학 대중화 패러다임에 묶인 과학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독자성을 상실하게 된다. 저널리즘의 선택(selection) 기능은 과학의 하부 구조로 전락한다(Kohring 2005, 224). 그 결과 과학 내부에서 진행되는 선택 과정에 대한 관찰과 비판에 필요한 시각은 차단되거나 무뎌지며, 예컨대 어떤 연구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재원으로 왜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저널리즘의 비판은 어려워진다. 또한 과학 저널리즘의 선택에서 과학계의 기준이 지배하고, 상대적으로 독자와 시청자의 오리엔테이션은 주변부로 밀리게 된다.”

김영욱·박성철, <과학 보도와 과학 저널리즘>, 한국언론재단, 2005.

9) Mieth-Dietmar, <The Basic Norm of Truthfulness. Its Ethical Justification and Universality>, 1997, Christians, Clifford /Traber-Michael, <Communication Ethics and Universal Values>, Sage Publications, 87-104, 1997 김영욱·박성철, <과학 보도와 과학 저널리즘>, 한국언론재단, 2005.에서 재인용

10) 김영욱·박성철, <과학 보도와 과학 저널리즘>, 한국언론재단, 2005.

11) 특히 최근 문재인 정부는 수소경제, 비메모리, 바이오 등을 강조하며 연일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신데렐라에서 사기꾼으로 몰락한 테라노스의 CEO 엘리자베스 홈즈 ©연합뉴스

Reeve Musk)는 화성에 인류를 정착시킬 계획을 추진 중이고, 그가 대표로 있는 테슬라를 비롯한 여러 IT기업들은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공유경제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한국은 택시기사들과 정부 그리고 모빌리티 스타트업 간의 갈등이 한창이다. 미국과 중국은 화웨이의 5G 개발을 계기로 무역전쟁에 돌입했고, 얼마 전 중국에선 유전자 조작 아기가 탄생했으며, 브라질에선 유전자 드라이브라는 기술을 통해 지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모기를 박멸하려고 시험 중이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단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사회를 빠르게 구조하고 있다.¹²⁾

시민 모두가 과학기술 보도를 통해 사회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물론 한국 언론이 정치나 시사 뉴스처럼 노력을 한다면 한국의 시민들이 과학기술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될 지도 모르지만 더 중요한건 시민이 아닌 언론의 책무다. 빠르게 기술사회로 진입 중인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한마디 한마디는 생각보다 더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예를 들어, 한

국은 지금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실제로 현장에선 이제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남은 영역은 바이오뿐이라는 이야기가 오가며, 바이오산업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투자한 우리 주변 이웃의 이야기이기도 하다.¹³⁾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을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하면서,¹⁴⁾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개인투자의 양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엘리자베스 홈즈(Elizabeth Holmes)의 테라노스(Theranos)라는 생명공학기업이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조 단위의 거대한 사기를 치는 일이 벌어졌다. ‘테라노스 스캔들’이라 불리는 이 사건의 전말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탐사 보도 전문 저널리스트인 존 캐리루(John Carreyrou)에 의해 《배드 블러드》라는 책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테라노스 스캔들은 실리콘밸리처럼 전문가들이 가득한 투자환경에서조차, 바이오산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부실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테라노스 스캔들에서 언론은 이 회사의 가치를 부풀리고 시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가 과열되고 있고 천문학적인 자금이 몰려들고 있는 한국에서, 새로운 테라노스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개개인의 건강이나 투자 등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12) 필자의 칼럼을 참고할 것. 김우재, 〈공룡과 모기와 한국〉, 한겨레, 2015.7.6.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699054.html>

13) 다음 뉴스는 바이오기업에 몰린 자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이하린, 〈비 믿고 영화 ‘엄복동’에 150억 배팅했다가 고작 ‘13억’ 번 섀트리온 서정진〉, 인사이드, 2019.3.11. <https://www.insight.co.kr/news/215601>

14) 〈문 대통령 “바이오헬스 앞서갈 적기”...국가비전 선포식 참석〉, 매일경제, 2019.5.22.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5/337245/>

있는 과학기술과 의학 보도의 경우, 독일처럼 경제 기자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¹⁵⁾ 미국의 과학 기자 로버트 리 호츠(Robert Lee Hotz)의 말처럼 “순수한 과학자가 이제 그렇게 순수한 것은 아니다. 과학자가 더 이상 오직 진실만을 위해 연구하지는 않는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톡옵션의 감춰진 가격, 컨설팅 계약, 특허권, 상업적 연구 계약은 과학자들에게 아주 친숙한 것들이다”¹⁶⁾ 과학 저널리즘은 이제 비판적 과학 저널리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비판적 과학 저널리즘을 향해

한국의 과학 저널리즘은 시민에게 과학을 파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즉 과학 저널리즘은 과학 대중화의 도구였으며, 저널리즘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않았다. 나는 언론의 과학기술 보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과학과 사회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과학의 사회화’ 혹은 ‘사회의 과학화’라고 불려도 무방할 것이다.¹⁷⁾ 나는 여러 학자들을 따라 이를 ‘비판적 과학 저널리즘’이라 부를 것이다.¹⁸⁾ 과학을 사회화시킨다는 말은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과학과 기술을 둘러싸고 있는 체계와 권력을 인지하고 이를 견제 및 비판한다는 뜻이다. 과학은 현실을 규정하고 기술은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 과학기술 그 자체가 권력은 아니지만, 과학기술과 그 사회적 맥락에 대한 무지는 시민이 삶의 주체가 되길 바라는 저널리즘의 목표를 무너뜨린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 저널리즘이 과학기술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비판적 저널리즘은 사소한 오류와 잘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업을 통해 시민과 사회 전체가 과학기술을 비판적으로 이

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반과학 혹은 반기술적인 저널리즘은 비판적 과학 저널리즘이 아니다. 과학기술은 현대사회를 지탱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를 부정하는 저널리즘은 그 어떤 생산적인 결과도 내놓을 수 없다. 비판적 과학 저널리즘은 과학기술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작업이 아니라 그 기반을 더욱 건강하고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이어야 한다. 과학 저널리즘의 문제는 결국 과학 저널리즘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저널리즘이 정치 영역에서 보여주는 각종 선정성과 피상성의 문제가 과학 저널리즘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과학 저널리즘에 고유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에게 과학기술의 문제가 곧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문제임을 언론이 진작부터 일깨워 왔다면, 이렇게 따로 과학 저널리즘을 논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정치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과학 저널리즘을 다룰 때 이런 정치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왔다. 따라서 답은 간단하다. 비판적 과학 저널리즘은 한국 사회의 시민이 과학기술에 정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매체가 되어야 한다. 한국 시민은 대부분 정치 전문가로 성장한다. 이제 그들 모두를 과학기술 전문가로 만들면 된다. 그게 과학 저널리즘의 목표여야 한다. 과학과 기술은 우리 삶에 정치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

15) 김영욱·박성철, 《과학 보도와 과학 저널리즘》, 한국언론재단, 34쪽, 2005.

16) 김영욱·박성철, 《과학 보도와 과학 저널리즘》, 한국언론재단, 35쪽, 2005.

17) 김영욱·박성철, 《과학 보도와 과학 저널리즘》, 한국언론재단, 2005.

18) 김성재, 〈기조 발표: 비판적 과학저널리즘〉,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1-12쪽, 2004.